

# 좌우 수렴시대의 언론

이한우  
조선일보

## I. 가치투쟁에서 가치경쟁으로

지난 18대 총선이 갖는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필자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의 종언'이라는 평가다. 그렇다고 일부 우파 논객이 주장하듯이 민주화 이후 선진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진화가 반(反)민주화는 아니며, 민주화는 선진화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시대의 종언'이라는 평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확히 말하면 '민주화 절대주의의 종언' 혹은 '민주화 근본주의의 종언'이라는 점에서도다. 다른 모든 가치들을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라는 단어에 예속시키던 사고 및 행동패턴이 끝났다는 뜻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결과 한쪽 세력에 의해 절대가치로 여겨졌던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가 상대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쟁은 경쟁으로 바뀌었다. 실은 이런 전환의 필요성은 이미 5년전쯤에 왔지만 그 때는 민주 반민주의 투쟁이라기보다는 민주세력의 '문화'와 전통집권세력의 '문화'와의 충돌이었고, 여기서 민주세력 문화가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가치투쟁이 가치경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지난 5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 탄핵국면 하의 총선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탄핵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사리 자리잡아가던 민주주의의 틀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법리적 근거를 떠나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 사회 진보세력의 성장으로 보았던 분석은 그래서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때의 열린우리당 승리가 진보 좌파의 승리가 아니듯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파 정당의 압승도 보수 우파의 승리로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4년만에 그 많은 국민이 좌파에서 우파로 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분석의 필요상 좌우 분석을 동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로지 그것만

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정치를 나눠보는 것은 분석이 현상을 압도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투표율이 절반 이하를 기록해 민주주의의 위기 운운하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업살 내지 오도된 분석이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국민들은 이번 총선 투표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투표율로 그런 세력을 응징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를 흔들지 않는 한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이념적 좌표는 그리 크지 않다. 이 점은 누구보다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 동시에 2008년 대한민국의 전반적 수준은 좌우의 이념적 거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중요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좌우 양극단 세력의 '외과적 제거'였다. 그것은 공천과정에서도 이뤄졌고 선거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진행됐다.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 폭이 17대 국회에 비해 확실하게 좁아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일단 우리 앞에 놓여진 4년은 '좌우 수렴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재야세력의 제도화를 통해 제도권의 정당성을 강화해왔다면, 87년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축소 내지 수렴이 제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 Ⅱ. 좌우 가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 큰 차이에서 작은 차이로

80년대 좌우 대립의 상징적 표현 중의 하나가 '혁명이나 개혁이나'라고 본다. 혁명이 좌파, 개혁은 우파였다. 80년대말 90년대초 사회주의 붕괴로 한동안 좌파 내지 진보진영은 정체성 혼란에 빠졌지만 제도화/합법화라는 이름으로 의회주의를 수용하면서 '재야세력의 원내 진출'이 90년대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의회주의를 수용하기 곤란한 세력들은 일단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쓰고 활동했다. 혁명은 포기했고 스스로를 '개혁' 세력으로 불렀다. 대신 우파를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이 언어투쟁 내지 네이밍싸움에서 분명 좌파는 승리를 거뒀다. 수적으로는 분명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내지 좌파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진보 좌파 진영이 의회주의의 수용을 체질화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의회주의의 수용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수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갖지 못한 진보 좌파 진영은 '민주 평화 개혁' 세력이라는 레토릭으로

자신들의 모호한 지향점을 포장하면서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려 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재로서의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체재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한 데 진보 좌파, 특히 노무현대통령 집권기의 진보 좌파의 딜레마가 있었다. 애당초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온갖 정치적 파행의 기본적인 동기는 궁극적으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진보 좌파의 자멸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적어도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에 진출하게 된 통합민주당의 면면을 보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충성도가 지난 열린우리당에 비해 훨씬 강하다. 역으로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보완적 의미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조차 색깔공세를 가했던 의원들은 상당수 국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좌우의 수렴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의회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우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이념적 차이는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의 경우 정체성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한 정당의 정체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체성 논쟁을 벌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렴되어 버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이념 차이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 과거의 광폭 스펙트럼 하에서의 정체성 논쟁과 지금과 같은 협폭 스펙트럼 하에서의 정체성 논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는 논쟁이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겠지만 과거식의 정체성 논쟁이 재연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 Ⅲ. 글로벌리즘은 공유의 가치

민주당 앞에 가로 놓인 가장 큰 도전은 결국 글로벌리즘 혹은 글로벌리제이션을 의회주의를 수용할 때처럼 하나의 환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당 정체성의 핵심사안으로 간주해 반(反)글로벌리제이션 혹은 소극적인/선택적인 세계화 순응으로 나아갈 것이냐의 선택이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굳이 밝히자면 이 문제는 결국 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당의 꿈을 꿀 것이냐 비판적인 불임야당의 길을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좌파 진영은 여전히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고수해야 하지만 그것이 글로벌리제이션과 충돌할 때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그런 가치들을 재정립해 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이념적 차원에서는 집권당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기존의 진보 가치가 글로벌리제이션과 충돌할 때마다

기존 가치를 고수할 경우 그 어떤 출중한 인물이 출현해도 집권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대성격의 변화다. 이미 386의 주축을 이뤘던 30대와 40대는 급속하게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글로벌리제이션에 적응해가고 있다. 문제는 20대이다. 20대는 날 때부터 글로벌 세대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했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책들을 맘껏 읽고 자랐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대부분이 산업화 세대다. 산업화 세대의 자식은 20대가 처음이다. 30대 중반 이후는 부모들의 다수가 농경사회의 자식들이었다. 농경문화와 산업문화는 실은 30년, 50년이 아니라 1000년의 문화단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는 그런 점에서 특히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좌/우, 진보/보수의 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특질들을 갖춘 신인류들이다. 이들에게 글로벌리제이션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사실이자 환경이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선동 내지 의식화가 얼마나 먹혀들 수 있을까? 진보 좌파가 집권을 포기하면 모르지만 재집권의 꿈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20대에 대한 깊은 천착에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는 충고를 감히 해주고 싶다.

#### Ⅳ. 좌파의 과제: 사회적 약자의 재발견

평화, 환경, 인권 등과 같은 가치는 이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평화만능, 환경근본주의, 인권절대주의는 사회운동하는 좌파들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진보나 좌파는 정치권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좌우수렴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게 될 한국 의회에서 어느 우파가 평화 환경 인권을 거부할까?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와 글로벌리즘을 수용한 진보 좌파의 새로운 우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개 기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논하는 것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사회적 약자의 재발견 내지 재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약자, 즉 가난하고 고통받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강도 높게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맞는 진보 좌파를 꿈꾼다면 어린이 보호, 노인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때 '어린이를 지키는 정당', '노인을 정책으로 공경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과연 있는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이념투쟁,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의 어린이,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평안해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일단 묻고 싶다.

## V. 우파의 과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개인적으로 이번 이명박정부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우파 내지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 세력이 정상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집권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1997년 김대중정부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 2002년 준(準)반미 성향의 진보 좌파 세력의 집권 못지 않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좌건 우건 앞서 말한 대로 기존의 민주주의 틀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어느 쪽도 민주주의를 독점할 수 없으며, 결국은 한쪽은 우파의 가치, 한쪽은 좌파의 가치를 던져놓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런 틀에서 '경제발전(성장)' 만을 내세우는 우파의 가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유의 소중함,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우파의 가치 못지 않게 공동체에 대한 헌신,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 따뜻한 사회건설, 역사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정치적 가치들을 계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명박정부의 플랜이 성공하더라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는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그에 답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VI. 좌우 이념 수렴의 감시자로서의 언론

다행스럽게도 일단 좌우 이념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일단 선거 결과는 이뤄졌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무엇보다 이상에서 말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한국 사회를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본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정치활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좌우 이념의 투쟁이 완화된 만큼 다분히 정치진영의 불모처럼 돼 있는 언론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변화된 현실에서 보다 생산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은 자신과 가까운 정권을 옹호하는 데 몰두하고, 다른 한쪽은 비판하는 데 올인하는 식의 논조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오히

려 진보성향의 언론은 진보정당을, 보수성향의 언론은 보수정당을 향해 그 정당들이 각자 새로운 가치정립과 관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느 쪽의 언론이건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불신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